

2021년 1월 30일 제주녹색당 2차 당원토론회

주제: 선거-의사결정을 말하다

참여: 그린씨, 신현정, 이희준, 안재홍, 김순애, 정화빈, 김명완, 부순정, 한보스, 현성미, 김송기은 (총 11인)

최종: 그린씨, 신현정, 이희준, 안재홍, 김순애, 정화빈, 부순정, 한보스

1. 토론기록

1) 당내경선 과정: 가산점 제도

- 가산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여성출마프로젝트 등) 논의가 늦게 되었다.
- 농특위가 총선 2개월 전에 꾸려진 점, 가산점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언제 논의했냐가 문제임.
-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지점 검토 부재
-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될 수도 있다. 당규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 전운위의 현장발의가 문제가 되었던 지점. 현장발의를 통해 뒤집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 (선거 기간 중에 현장발의 안건으로는 부적합했다.)

2) 녹색당의 후보 전략

- 정당에 투표할 때 비례후보를 분석해 보고 투표를 한다. 유권자가 표를 던지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
-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 중심의 선거는 녹색당이 줄곧 주장했던 선거 형태. 녹색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비례후보를 어떤 사람으로 내세워야 할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생각.
- 창당 이후 유례없는 득표율이 단순히 당내 혼란 때문은 아니다. 비례후보 선출 과정에서 비례후보를 누구를 뽑는가는 중요한 문제.
- ① 비례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당내의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 ② 농민후보 선정 과정에서 들여다보았을 때 가산점제도 등 녹색당이 지향하는 후보 선출 과정이 당원들이 납득 가능하지 않았다. (예. 농민에 대한 정의)
- 비례후보가 정당의 얼굴이 된다는 것은 당이 의제정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닐까? 총선 이후에 다양한 위원회들이 생겨났다. 실제로 전운위에 들어간 한 표를 행사하는 위원회로.
- 지역 중심의 풀뿌리 정치가 녹색당의 근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례 중심으로 간다면 의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지역에서 논의 필요. 제주 녹색당도 과거에는 지역모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 의제 중심으로 가기도 한다. 의제나 현장이 새로운 풀뿌리의 흐름일 수도 있다.

- 비례로 간다면 정당의 이름으로 정책으로 승부하는 건데, 어떤 정책을 1순위로 내세울 것이냐가 중요해질 수도 있다. 의제간의 경합이 될 수도.
- 이제 지역정당이 할 역할은 무엇일까? 제주녹색당도 똑같은 토론 과정 필요 제주녹색당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할 것인지.

3) 지역당의 총선 대응

- 비례 중심 선거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총선의 과정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함. 선거 관련해서 녹색당이 어떤 선거전략, 어떤 후보를 내보내야 하는지.
- 지역당에서 관련된 상황을 잘 받고 피드백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제주녹색당도 선거 준비나 후보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다.
- 정의당의 후보 선출 과정도 당내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 득표와 순위 불일치. 굉장히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을 보고 있고, 성공적이라고 생각됨. 강력한 지도부의 결단으로 가능

4) 선거연합

- 당원들은 하승수의 정치개혁연합을 염두에 두고 투표했던 것 같다. 대다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 한 석이라도 가져가야 한다는 당원들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선거연합이라는 정치공간을 활용해서 녹색당의 정치를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당원도 있었을 것. 플랫폼 정당 뿐만 아니라, 진보연합, 혹은 위성정당에 대한 대응으로 선거연합을 구상했던 여러 가지 안 존재
- 선거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어느 선거연합인지. 이를테면 정치개혁연합이라거나)에서 당원총투표를 실시했다는 문제가 있음.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되지 않았음.
- 선거연합에 대한 쟁점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게시판 토론밖에 없었다. 당원총투표라는 중대한 결정 시스템을 부여하는 게 맞았는가?
- 당원들에게 선거연합을 중단시킬 만한 명확한 근거도 없었음.
- 당시에 선거연합과 관련해서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음.
- 선거연합을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는지 평가 필요. 급박한 상황은 계속 올 것. 안타까운 것은 총투표를 했던 당원들의 결정을 뒤집어 버린 것.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당원총투표인데, 이것을 뒤집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
- 선거연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운위와 선대본에서 계속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당원총투표로 던져버렸다.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을까. 훼손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녹색당이 선관위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제주에서 전국위

에 권고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선대본과 전운위가 별개로 존재. 모호한 의사결정구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
- 전운위가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당의 진로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밀어붙이면 당원대회가 계속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선대본과 전운위의 관계가 중요한데, 선대본이 다른 정당들처럼 선거 기관처럼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의견도 있었다. 또 당연히 전운위가 견제 기관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녹색당이 쌓아왔던 다양한 조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
- 기후위기를 의제로 채택하겠다는 선거연합 다짐도 있었지 않은가.
- 녹색당의 비전에 맞는 정치를 선보이기 위해서 민주당 세력과 같이 하는 지점이 이후의 녹색당에 +가 될 것인지, -가 될 것인지에 대해 잘못된 판단 존재. 내부 역량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연합을 논하는 것이 좋지 않은 흐름 생성.
- 당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함.

※합의되지 못한 부분

↳ 선거연합을 전술로만 볼 것인가, 전략으로 볼 것인가

↳ 선거연합 과정에서 논의가 중요한 것인지, 선거연합을 하나의 정치적인 선택지로 볼 것인지.

5) 녹색당의 스펙트럼

- 녹색당의 강령 면에서, 반정당의 정당이며 여러 가지 의제의 무지개 정당이기도 한데, 녹색당이 최근에는 반페미 정당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다. 녹색당에게는 곤혹스러운 상황. 다시 체계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 현실주의/원칙주의로도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탈당한 원칙주의자들에게 녹색당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채택은 성장주의 노선과의 연합을 추구한 것, 성장주의로 돌아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탈당한 사람들 존재.
- 의제 자체에 대한 논의 부족, 당이 어떤 방식으로 의회정치에 입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만 많았다.
- 기후국회라는 것에 대한 것도, 국회에서 기후 의제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인데, 국회를 더 핵심 포인트로 둘 것인지, 기후를 핵심 포인트로 둘 것인지. 기후국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했고, 그 정도는 공유가 되어 있었다.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의 전략으로 할 것인지, 가치를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둘 것인지도 공유가 안 되어 있었다.

- 각자의 질문들로 각자의 이야기들만 계속 하게 만들었다.

6) 기타

- 평당원들의 일상화된 소통 공간과 의결구조가 필요하다.
- 지금의 녹색당은 창당 수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당무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역할을 해야 할지도 지역당에서 이야기 나누어야 할 것 같다.

3. 앞으로의 고민방향

- 선거 전략과 연계한 가산점제 정비
-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 전운위, 선대본/당원의 권한과 역할,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정 필요
- 전운위의 현장 발의에 대한 규정 강화
- 비례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당내 체계 정비-의제간 경합의 장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지역 기준/의제기준/현장기준
- 기후국회에 대한 내용과 전략 합의, 당의 선명한 기초 부재
- 평당원들의 일상화된 소통 공간과 의결구조